軍 군사시설 일방지정 우려 해소되나

원희룡 지사-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어제 간담
제주해군기지내 보호구역 지정 놓고 의견 나눠
"차근차근 논의… 대화 통해 합의점 도달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협의를 본격 진행키로 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원희룡 도지사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20일 제주국제공항 의전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원 지사와 부 총장 외 정일식 해군기획관리참모부장,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영진 서귀포시 부시장 등 제주도, 해군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취재진에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원 지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와 해군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출신으로 첫 참모총장에 취임한 것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며 "특히 제주에는 강정해군기지라는 현안이 있기 때문에 제주출신 총장으로서 진실과 성의를 담아 (현안을)잘 풀어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제주해군기지 군사보호구역 지정 문제는 그동안 국회와 도민 현안으로서 지역사회에서도 논의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풀어나가기로 했다"며 "부 총장도 임기동안에 좋은 방향으로 잘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군사보호구역 지정 관련 제주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러가지 실무적인 문제, 규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정한 결론을 전제해 풀기보다는 도민들이 우려하는 점들이 해소될 수 있게 지혜로운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계속 (해군과)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도 "제주도와 해군이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이견이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도와 해군이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협의했다"고 말했다.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냐는 질문에는 "대화를 통해 당연히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해군은 지난달 중순 제주해군기지 내 해상 수역 전체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싶다며 제주도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일 제주국제공항 의전실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을 안내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강정마을 방문

"임기내 갈등 해결 노력하겠다"

해군-마을회 현안 논의
사과·명예회복 등 다뤄

강정평화네트워크 시위
"상생은 해군기지 폐쇄"

제주 출신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20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찾아 "총장 임기 내에 최대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약 40분간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가진 강정마을회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 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일 먼저 강정마을을 찾아뵙고 싶었는데 코로나19로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며 "취임할 때 대통령님께서도 강정의 중요성을 특별히 말씀하셨고 주민분들께 잘 설명해 드리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한 달이 지나) 늦게 온 만큼 빠르게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마을 분들과 손잡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은 "강정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주민 공동체의 갈등을 많이 겪었다"며 "강정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순수하게 건설 반대 투쟁을 했던 주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신다면 그때 진심으로 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지가 지어졌다고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정부·국방부·제주도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 성공한 국책사업이 됐을 때, 진정한 상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치뤄진 간담회에서는 해군과 마을회 간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정마을회 관계자에 따르면 강정마을회는 면담을 통해 ▷해군참모총장의 사과를 비롯한 강정주민의 명예회복 ▷남방파제 개방 등 사업의 적극 추진 ▷민·관·군 상생협의체의 실효성 있는 운영 등을 요구했고 부 총장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강정평화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0시 강정 해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의 제주 방문을 규탄한다"며 "진정한 사과와 상생은 해군기지의 폐쇄다"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 방문에 앞서 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귀포시청을 방문해 양윤경 서귀포시장 등 서귀포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귀포시는 시정 현안에 대한 군의 협조를 구하고 민관군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 총장에게 요청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숨진 의붓아들, 잠자던 아버지의 몸·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낮아"

어제 고유정 항소심 2차 공판
법의학자·소아과 전문의 증언

전 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법의학자와 소아과 전문의는 숨진 의붓아들이 잠자던 아버지의 몸이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 심리로 20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법의학자 이정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숨진 의붓아들(만 4세)의 목 아래와 얼굴 주위에 나타난 점상출혈을 근거로 강한 힘에 의한 흉부 압박과 입과 코가 막히는 비구폐색이 동시에 진행돼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질식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울혈(장기나 조직에 피가 모여 검붉게 변하는 현상)이 피해자의 얼굴에선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강한 압박이 이뤄지다 호흡이 완전히 멈추면서 몸이 축 늘어지자 (숨진 것으로 보고) 압박이 풀어졌다는 의미"라며 "호흡이 완전히 멈춘 후에도 최대 10분간 심장은 계속 뛰기 때문에 이때 혈액이 돌면서 (압박에 의해 조직에 피가 모이는) 울혈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증언은 피해자가 고의에 의해 살해됐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잠이 든 아버지의 몸 등에 눌려 사망했다면 아버지가 무의식중에 계속 압박을 가했다는 뜻이어서 시신에선 울혈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누군가 숨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박을 해제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또 이 교수는 이렇게 사람이 호흡을 완전히 정지한 후 심장 박동이 몇분간 유지해도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아버지 몸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은 없느냐'는 고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소아외과 전문의도 "1세 미만 아동이 부모의 몸에 눌려 숨진 경우는 있지만 만 4세 아동에게 그런 일이 발생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사망한 피해 아동 발육상태도 정상 범주에 있다고 소견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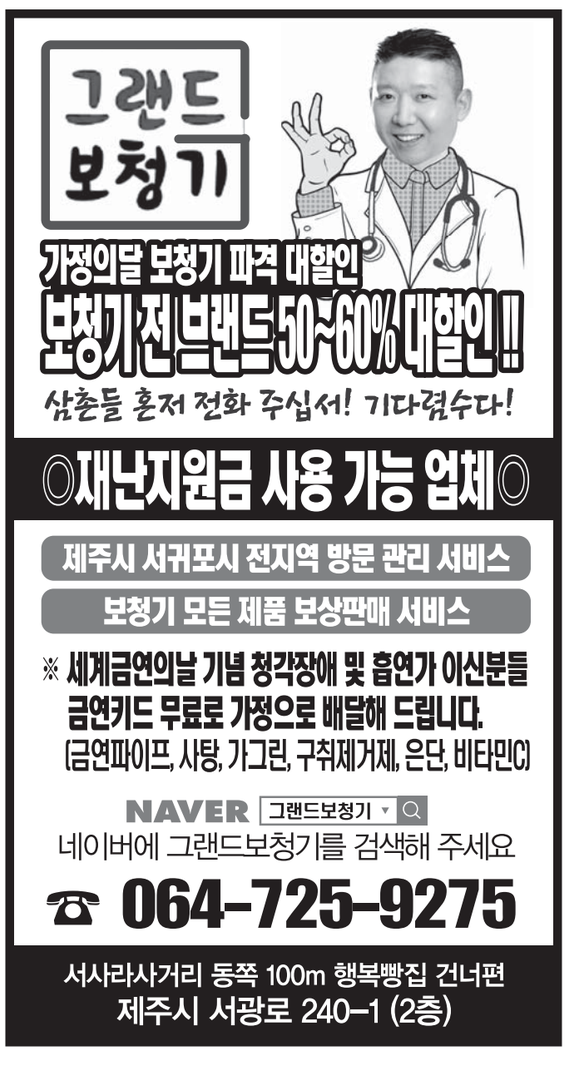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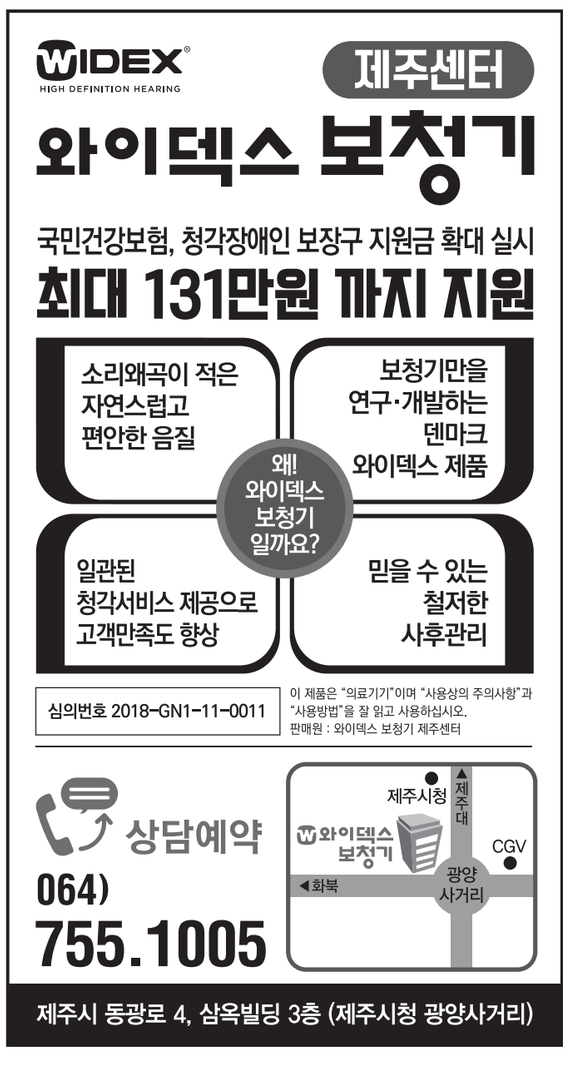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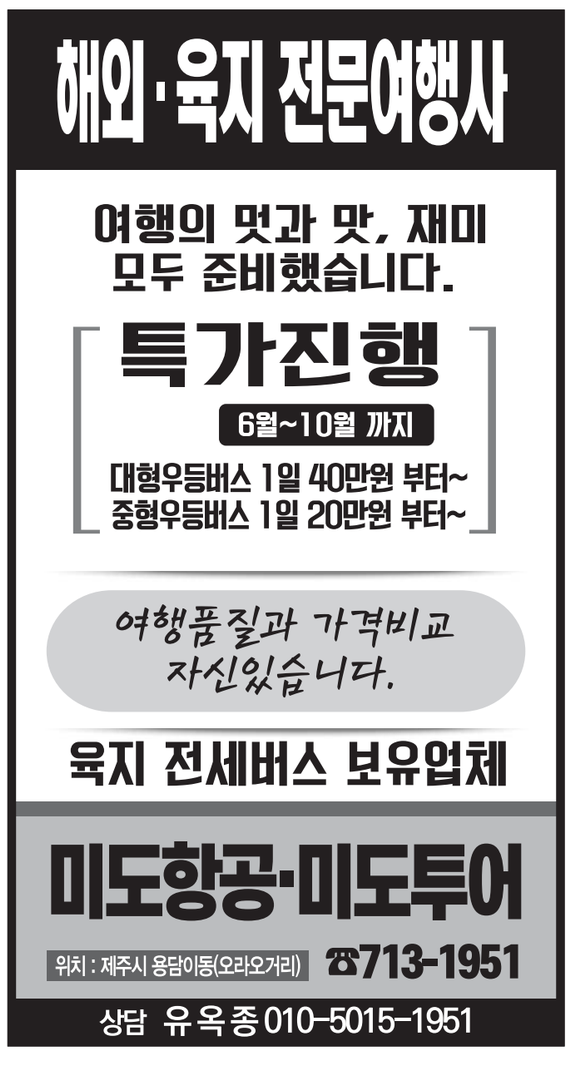
이날 재판에서는 충북 청주상당경찰서가 제시한 증거 중 의붓아들 사망 추정 시각에 고유정이 자택 컴퓨터로 인터넷을 했다는 내용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 증거 분석관은 "(청주상당경찰서가) PC 사용 기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의붓아들이 숨진 날인) 지난해 3월 2일 오전 2시30분쯤 고씨 인터넷 블로그를 방문했다는 내용은 잘못됐을 것"이라며 "다만 이는 고유정이 당시 PC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다른 수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했다. 이상민기자

협동조합 노조 "김녕농협 노동자 탄압"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협동조합 노조)는 20일 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녕농협이 한림농협에서 부당하게 전적(소속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해 온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 노조는 이날 "한림농협과 제주시 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지난 3월 한림농협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노조 임원과 일반 직원 등 4명을 퇴사처리하고, 김녕농협 등으로 본인 동의 없이 부당 전적했다"면서 "이어 김녕농협은 이렇게 부당 전적된 노조 임원이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임원을 모든 회의에서 배제하고 노동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지급한 마트 이용권을 당사자에게서만 다시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동조합 노조는 "농협중앙회는 농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를 즉각 조사해 조합장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